출판기념회 쇄도…"얼굴 알리기 vs 정치자금 창구"

"인지도 높이고 정치적 포부 펼치고 지지층 점검"

"편법 후원, 정치자금 모금회, 준조세 구태"…비판도

바야흐로 '출판기념회 시즌'이다. 봇물 터지 듯 초청장이 쇄도하고 있다. 여·야, 현역·신인, 계파 여부와 상관없이 너도나도 붐이다. 인지도와 영향력이 높은 전국구 정치인이나 대중성 높은 인플루언서를 초대하거나 축하영상 메시지를 받는데도 공을 들이고있다.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출마예정자의 얼굴과 정치적 소신을 알리고 지지층도 점검해 볼 수 있어 유익한 반면 합법적 선거자금 창구이자 '컨벤션 효과'를 노린 구시대적 선거양태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현금 납부 금지와 정가(定價) 구매 등 현실적 대안을 원하는 목소리도 높다.

19일 광주·전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총선표심의 가늠자가 될 연말 민심을 노리고 최근 주말과 휴일에 최소 2~3건, 많게는 10건 가까운 입지자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다. 모두 오프라인 대면 출판기념회로 각 행사장에는 적게는 300~500명, 많게는 5000명~1만 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유력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거나 영상 메시지를 보내와 지지세를 과시하는 정치 이벤트로도 활용되고 있다.

입지자들은 자서전을 매개로 출마 이유와 정치적 철학과 포부, 삶의 궤적과 정치여정 등을 설명하며 지지와 성원을 호소하고 있다. 엄격한 선거법 탓에 '얼굴 알리기'에 어려움이 많은 정치 신인들 입장에선 더 없는 홍보수단이다.

또 나만의 차별화된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하거나 정부 정책과 검찰주의를 비판하며, 시대정신과 선명성을 부각하기도 한다. 계파색을 드러내며 진영논리를 펴는 입지자도 적잖다. 유명 인사와의 북콘서트도 체급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전가의 보도' 마냥 활용되고 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한 관계자는 "2월 말 경선이 곧 본선"이라며 "권리당원 수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 등을 통한 컨벤션 효과에 힘을 쏟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판기념회를 둘러싼 곱잖은 시선은 여전하다. "공공연한 폐단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출판기념회는 누구나 열 수 있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만 제한된다. '책값'과 '사용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공제도 안된다. 영수증 발행,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회계 검사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치후원금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때문에 출판기념회를 두고 '편법 후원' '정치자금 모금회' '준조세'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졌고, 유력한 출마자의 경우 '수 억 원을 모았다'는 뒷말도 심심찮게 들리곤 한다. '대필 자서전' 논란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돈 가뭄에 시달리는 출마자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행사지만 현장에선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할 지 고민하는 정당인과 기업인, 공직자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출판기념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가 판매 ▲현금구매 금지 ▲1인당 구매한도 설정 ▲수익금 신고 ▲현역의원 출판기념회 자제 의정보고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2014년 좌초된 '정치인 출판기념회 금지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도기 기자

"광주연구원을 씽크탱크, R&D 메카로"

안평환 광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강조

날로 심화되는 국토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연구기관을 국가균형발전의 씽크탱크이자 연구개발(R&D) 메카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안평환(더불어민주당·북구1) 의원은 17일 제3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소재 연구기관들의 연구만으로는 지역의 삶이 결코 더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50.5%가 살고 국가자원이 한 곳에 집중된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거점도시 중심의 다극 체제를 만들고, 국가적 위기인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연구기관과 학계가 지역균형발전 R&D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주와 전남, 전북 등 '낙후의 대명사'인 호남권 3주체가 참여하는 논의구조에 더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이론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어 낼 동력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60년 간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 많은 중앙정부 정책이 시행됐지만 결과는 수도권의 과대한 팽창으로 귀결됐고, 광주와 전남·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지역에 맞는 현실감 있고 실현성 높은 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산업,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능적, 경제적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 지역발전의 축이 될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60억 삭감 尹 5·18 공약사업 국비 증액해야"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5·18국제연구원 예산 정상화 촉구

광주시의회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와 5·18국제연구원 등 5·18 관련 대통령 공약사업들에 대한 국비 증액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시의회는 17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18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상정된 '5·18 관련 대통령 공약사업 국비 증액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와 5·18국제연구원 예산에 대한 정상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명진 5·18특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5·18 사업비를 일괄 감액해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의 시발점이 된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옛 국군광주병원 일원에 내년 2월 준공 예정이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내년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행안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르면 센터 설립 후 예상되는 치유대상자는 1년 이내 6300명, 3년 이내 1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광주 본원의 경우 61명 제주분원은 27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안에서 본원 23명, 분원 20명으로 인원을 축소하고, 올해 예산 69억2000만 원에서 내년 27억 원으로 42억2000만 원을 삭감했다. 비율로는 무려 61%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5·18국제연구원은 51억 원의 예산중 기재부의 30% 일괄 감액 결정에 따라 31억 8000만 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정다은 5·18특위위원장은 "현 정부의 5·18 예산 삭감은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정부가 광주와 호남을 홀대하고 5·18 가치를 폄하하는 지역 차별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일상 기자

윤, 오늘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선 '부산엑스포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영국 방문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막판 외교전을 펴고 26일 귀국한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20일 영국 런던을 찾는다. 2023년은 한영 수교 140주년으로,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방안을 논의해 브렉시트 이후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영국 시장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6위, 유럽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반도체·AI(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영국과 협력 수준을 높여 신시장을 확보하고 공급망·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영 FTA가 발효된 지 몇 년이 됐지만, 국제 경제·안보 지형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며 "이번 방영(영국 방문) 계기에 한영 FTA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신규 협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 광주시당 2024 총선공약개발단 시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2024 총선공약개발단이 지난 18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 총선공약개발단 본격 '시동'

이병훈 위원장 "국민 삶을 지키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2024 총선공약개발단이 본격 활동에 나섰다.

19일 광주시당에 따르면 총선공약개발단은 전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발대식에는 이병훈 시당 위원장과 공약개발단, 선출직 공직자와 핵심 당원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당 총선공약개발단은 ▲민생을 살피고 돌보는 복지정책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안전정책 ▲노동·주거·일자리 등 민생 안심정책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완화해 함께 잘 사는 정책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희망과 기회정책 등 광주시민과 당원의 삶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저성장, 고물가 속에 시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의 위기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무능·무대책·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광주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 시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위원장은 "파탄 난 민생, 복지, 경제 회복을 위해 광주시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시민과 당원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개발에 올인해 국민 삶을 지키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지렛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공사현장 사고 긴급안내문자 시스템 개선해야"

서임석 광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

광주 도시철도 공사장에서 누수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주변 소상공인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안내문자 발송시스템을 개선하고, 사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서임석(더불어민주당·남구1) 의원은 17일 제3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뿐 아니라 주변 소상공인에게 갈 피해요소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기본적 대처방안"이라며 "주민들이 사고를 인지하고,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 안내문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광주시가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과 손괴방지 TF팀을 구성하고 상수도 관망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도입했음에도,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사고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경각심 차원에서 공사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규제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이준석 신당 창당 위한

'온라인 연락망' 구축 나서

신당 창당을 모색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지지자 온라인 연락망 구성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도 안 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 2만 6800분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라인 연락망 지역별 등록자 수를 표시한 사진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온라인상에 관광버스 920대를 구축하는 순간까지 달려보겠다"며 "돈 안드는 정치, 속도감 있는 정치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말했다.

이는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원산악회' 모임에서 지지자를 태운 관광버스 92대로 세 과시를 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8일 "최근 언론을 통해 제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접하셨을 것"이라며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과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교류하기 위해 연락망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이언주 전 대표와 함께 광주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해남·완도 먼저…2단계 추진하자"

해남 토론회서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 주장

서울~제주간 고속철도(KTX)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먼저 해남군과 완도군까지 건설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제주까지 연결하는 2단계 추진론이 제기됐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날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토론회에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통해 고속철도를 완공하고자 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은 제주도와의 협력방안 마련이 우선으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전라남도 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국가계획 반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향후 2단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TX 타고 제주가자!'란 주제로 윤재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해남.완도군이 공동 주관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하고, 다양한 대안 노선들에 대한 경제성 및 정책 분석을 통해 향후 일정에 따른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승필 대중교통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연규 삼보기술단 사장, 신순호 목포대 명예교수, 임광균 송원대 교수, 박석희 해남군 건설도시과장과 김진원 완도군 건설과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제주도 고속철 연결이 국토균형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 국가사업이라는데 공감하고, 고속철의 수혜지역이 되는 전남도내 타 지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실제 해외사례에서 나타난 고속철 연결이 제주도에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는 점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높은 고속철도 선호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서울~제주간 고속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남군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나주-강진-해남-완도, 나주-무안공항-임성리-영암-해남-완도, 나주-무안공항-임성리-해남-완도, 나주-해남-완도 등 다양한 대안 노선들을 검토하고, 앞으로 지역 여론 수렴을 거쳐 전라남도와 함께 사업 타당성 향상 방안을 마련 후 제5차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마다 국가철도망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5차 계획은 2026~2035년 기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에 착수한다.

명현관 군수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여야 예산 증액 심사…지역화폐 등 힘겨루기

20~24일 심사…지역화폐·R&D 예산 등 암초 '산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위 예산소위)는 오는 20~24일 증액 심사에 나선다.

하지만 지역화폐·연구개발(R&D) 예산 등 여야간 이견이 큰 증액 항목들이 많아 이들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우려 해소 방안도 내놨다. 민주당도 앞서 5대 미래예산(R&D, RE100 대비를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생 대책 위한 보육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세대 예산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야당간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시스